

‘제보 조작’ 국민의당 잇선 향하는 檢 칼끝

이유미 구속...이준서와 공모관계 고리 이용주 조사 가능성 이준서, 박지원에 사전 보고...朴 “인지 못했다” 파문 확산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의 특혜 채용 제보 조작 파문에 휩싸인 국민의당이 위기 극복에 총력전에 나서고 있지만 오히려 파문은 확산되고 있다.

제보 조작 당사자인 이유미(여·38)씨가 29일 밤 구속된 가운데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피의자로 입건되고 조작된 특혜 채용 제보 내용이 대선 당시 상임 선거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던 박지원 전 대표에게 먼저 건네졌다는 논란까지 겹치면서 사태가 꼬이고 있다.

29일 준용씨의 특혜 채용 제보 조작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이유미씨와 공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을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날 이 전 최고위원의 자택 압수 수색 과정에서 ‘잠재적 피의자’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하루만에 ‘피의자로 입건됐다’고 전했다.

검찰이 압수한 서류와 PC, 휴대폰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전 최고위원과 이씨의 공모 가능성에 상당한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울러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과 이씨의 공모관계를 고리로 제보 조작에 대한 ‘지도부 등 잇선 개입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지난 대선기간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장을 맡았던 이용주 의원과 수석부단장 김성호 의원, 부단장 김인원 변호사 등 관련 인사를 대거 소환, 참고인이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런 가운데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이

유미씨의 조작된 제보 의혹을 발표하기 전에 박지원 전 대표에게 먼저 보고했다는 논란까지 불거졌다.

‘문준용 특혜 채용 의혹 제보 조작’ 사건의 당내 진상조사단장을 맡은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의혹 발표 전인) 5월 1일 이유미의 카톡 제보를 박지원 전 대표에게 바이버 문자로 보냈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박 전 대표가 (당시 문자 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것 아닌가(싶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표가 조작된 증거를 인지하고 공명선거추진단의 공개 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가 주목된다. 이에 대해 박 전 대표 측에서는 “이 전 최고위원이 당시 쓰지 않는 핸드폰에 문자를 보냈으며 박 전 대표는 문자를 보거나 보고받지 못했다”며 “단순한 해프닝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박 전 대표 측은 이어 “박 전 대표가 당시 사용한 핸드폰의 끝자리는 6333번이며 이 전 최고위원이 문자를 보낸 핸드폰 끝자리는 0615번”이라며 “0615년 핸드폰은 지난 연말 탄핵 과정에서 문자 폭탄에 시달려 쓰지 않고 비서관이 보관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준용씨 특혜 입사 제보 의혹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11시 20분에 시작, 40분 만에 종료됐고 이날 밤 7시40분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국민의당에게 경고한다! 국민이 만들어낸 새정

“국민의당, 새정부 발목 잡지 말라” ‘시민주권행동’과 ‘21c광주전남 대학생연합’ 등 시민단체는 29일 국민의당 광주시당 앞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새정부 발목 잡는 국민의당에게 경고한다’는 구호를 외치는 등 항의집회를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

野 “논문 표절왕” vs 與 “명예 훼손”

김상곤 사회부총리후보 청문회

29일 개최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논문 표절을 둘러싸고 날 선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에 제기된 의혹을 내세워 후보 자격이 없다며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압박했지만, 여당 의원들은 야권이 확실한 근거가 없는 의혹 공세로 후보자의 명예를 훼손한다며 응수했다.

자유한국당 이장우 의원은 “교육부 장관의 논문표절 의혹은 국방부 장관이 군대를 기피한 것과 마찬가지로 ‘국무위원 후보자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후보자가 석사 논문 130여 곳, 박사 논문 80여 곳을 표절하면서 논문복사기, 표절왕이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논문을 보면 포괄적 출처를 밝힌 것으로 나타나 있다”며 김 후보자에 대한 지원 사격에 나섰다. 같은 당 김민기 의원은 “야당 의원들

이 손 팻말에 ‘논문도둑 가짜인생’이라고 쓰여 있는데, 이는 명예훼손이자 인격 모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김 후보자는 “지금 기준으로 보면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당시 기준과 관행으로 보면 잘못된 부분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히며 물러서지 않았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이념편향 논란을 놓고도 여야가 설전을 벌였다. 한국당 김석기 의원은 “김 후보자가 주한 미군 철수, 한미동맹 폐기 등을 주장하는 등 교육부 수장으로 위험한 생각을 갖고 있고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맞서 유은혜 민주당 의원은 “인사 청문회는 사상 검증하는 지리가 아니다”며 “과거 색깔공세를 연상케 하는 공격은 자제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외교·자사고 폐지 논란에 대해 “기본적으로 대통령 공약인 (외교·자사고)폐지를 존중하지만 의견 수렴과 국가교육회의를 통해 정해졌다”고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김영록 농림·조명균 통일 청문보고서 채택

송영무 국방은 무산

조명균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결과보고서가 채택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9일 조명균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결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외통위는 이날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한 직후 전체회의를 열어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안건을 곧바로 가결했다.

여야는 보고서 종합의견에서 조 후보자가 일부 사안의 경우 우려가 있기는 하나 도덕성 및 직무능력 차원에서 대체로 적합하다는 의견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새 정부 출범 후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당일에 여야 합의로 청문 보고서를 채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외통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15분까지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이는 지난 28일 최단시간으로 종료(오전 10시10분부터 오후 6시17분까지)됐던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보다 빨리 끝난 것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도 이날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 개호 농해수위 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김 후보자의 보고서 채택을 선언했다.

농해수위는 종합 의견에서 “김 후보자

가 농림축산식품 분야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공직자로서 요구되는 도덕성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전날 김 후보자 청문회는 국산 농축산물에 대한 청탁금지법 적용 제외, 쌀 수급 안정 방안, 가뭄 해소 대책과 조류 인플루엔자(AI) 방역 대책,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논란 등 농정 현안을 둘러싼 정책 집의를 위주로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에 치러졌다.

김 후보자는 18·19대 국회에서 농해수위 활동을 한 전직 의원으로서 사실상 ‘의원불패’ 기록을 이어갔다. 한편,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결과보고서 채택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국방위원회는 이날 무산됐다.

특히 송 후보자에 대한 찬·반을 놓고 여야의 입장이 팽팽하게 엇갈려 송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 문제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야 3당은 청문회 이후 “청문회 자체가 아까웠다”면서 송 후보자에 대한 불가 입장을 더욱 확고히 했다.

야당의 확고한 불가 입장에 따라 송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결과보고서 채택 문제는 앞으로 상당 기간 표류할 가능성이 커졌다. 현 상황에서 ‘송영무 절대 불가론’을 주장하는 야당이 입장을 바꿀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회 국방위는 향후 회의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안철수당 탈피하자” 새 간판론

국민의당 내달 3일 의총서 입장 정리키로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특혜 취업 의혹 제보 조작 파문으로 ‘안철수 책임론’이 고조되면서 국민의당 내부에서 당 간판 교체론 및 제2창당론이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

하지만, 민심의 주목을 받을 만한 새로운 인물을 찾기 어려운 현실이라는 점에서 당내 결속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반론도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문병호 전 최고위원은 29일 BBS라디오에 출연, “당의 뼈대를 바꾸고 환골탈

태하는 각오가 있어야 한다. 참신한 사람이 당 대표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고 전했다.

당의 창업주인 안 전 대표와 ‘새정치’ 브랜드를 간판으로 내세우기 어려워졌다고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용호 정책위의장도 “‘새정치’를 더 이상 주장하기 어렵게 됐다”며 “당의 좌표와 정체성을 모두 새롭게 설정하는 제2의 창당 작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태일 혁신위원장은 TBS 라디오 방

송에 출연, “자신을 위해 뒤편 집단과 세력에 대해 장수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안 전 대표에게 사대 수습을 압박했다.

황주홍 의원은 PBC 라디오에서 “지역에서는 창피하다. 당이 이래서 잘 되겠느냐. 너라도 빨리 판단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를 많이 듣는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당내 결속이 우선이라는 주장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현역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단일대오를 형성, 이번 사태를 극복하고 새로운 좌표 설정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당내 지도부 및 중진들이 앞장서 당내 여론을 취합하는 적극적인 모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민의당은 다음 달 3일 의원

총회를 개최 김상곤, 조대엽, 송영무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와 이번 제보 조작 파문에 대한 입장을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민주당이 국민의당의 ‘문준용 의혹제보 조작’ 파문을 ‘대선농단’으로 규정하면서 맹공을 퍼붓는 가운데 원내 지도부에서 일각에서는 협치를 위해서라도 수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원내 협치 부대표인 이훈 의원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이 철저한 조사를 시작한 만큼 자제를 촉구 드리고 싶다”며 “정지권의 공방이 추가 경정예산이나 정부조직법 논의 자체를 방해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Aroma Life
www.aroma-life.co.kr

| ‘건강’과 ‘아름다움’을 모두 잡은 |

맞춤형 기능성 속옷의 명가 아로마라이프

- 한국, 미국, 일본, 중국에서 특허받은 유니크한 디자인
- 편안한 착용감과 생리적인 불편함을 해결한 제품
- 도레이社 LYCRA 를 사용 (별단면육각형)
- 특수 물질가공(원적외선, 음이온 방출)

(주)아로마라이프 상담 및 문의 1588-2219